

사회적기업의 그늘, 매출·고용 미미… 휴·폐업 증가세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 들여다보니

**기업수 5년새 5배 증가했지만
매출 2.1배, 일자리 1.8배 불과
1곳당 매출 5.6억… 45% 줄어**

서울시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공헌을 위해 지원해온 사회적기업의 매출과 고용 창출 효과가 적어 질적 성장을 이루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시에 따르면 사회적경제 기업 수는 2012년 819개에서 2017년 3806개로 약 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과 일자리 수는 각각 2.1배와 1.8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기업 증가수 대비 매출액과 고용

창출 효과가 낮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발전하면서 나타난 불평등과 빈부격차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등장한 개념이다.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두고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을 사회적경제 기업이라 일컫는다.

시는 지난 2012년부터 사회적경제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정 지원, 컨설팅, 사회투자기금 조성 등의 정책을 추진해왔다. 2012년 사회적경제 기업의 매출액은 6870억원에서 2017년 1조5000억원으로 8130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2017년 기준 기업당 매출액은 3억9411억원 밖에 되지 않는다. 일자리는 2011년 9300명에서 1만7500명으로 8200명 증가하는데 그

쳤다.

서울시의회는 “매출액 증가 대비 고용 창출 효과가 낮고, 1개 기업당 매출액이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1년 대비 2016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기업 수(718개 → 3512개)는 389.1%, 매출액(7283억 8500만원→1조9610억 5800만원)은 169.2% 증가했으나 사회적기업의 고용 창출(11890명→19769명)은 고작 66.3% 늘었다. 1개 기업당 매출액은 2011년 10 억1400만원에서 5억5800만원으로 45% 가량 줄었다.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2017년 성과보고서’에서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신생 사회적경제 기업들은 연매출 1~3억 원 규모로 대부분 초기 창업단계’라며

“사회적경제 기업 수 증가와 더불어 휴·폐업하는 경우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서울시 사회적기업 가운데 실제 운영 중인 유효기업 수 가동률은 67.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 의하면 2016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기업 3512개 중 실제 운영 중인 업체는 2236개로 파악됐다. 주요 원인은 협동조합 2701개 중 1460개만 실제 운영해 가동률이 저조했기 때문이라고 시의회는 분석했다.

이은애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은 성과보고서에서 “사회적경제의 핵심 원리인 자조와 연대의 실천이 얼마나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한계가 드러났다”

고했다.

시의회는 “서울시는 지난 2017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세부성과지표(공공시장 확대지원,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 기획연구 및 연구지원 사업 등)를 전년 실적 대비 낮게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 육성 수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시는 2017년 목표치인 3750개보다 45개 적은 3705개의 사회적 기업을 육성했다.

시의회는 “사회적기업 육성 수 목표 달성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적기업이 지속 사업을 유지하고 민간 부문 대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대문구청, 해빙기 위험시설 안전점검

1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흥은6구역 주택재건축 현장에서 열린 해빙기 위험시설 민관 합동 안전 점검에서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민간 전문가 등이 재건축 공사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친환경 도로포장’으로 미세먼지 줄인다

서울시, ‘중온포장’ 도입 등 실시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친환경 도로포장’을 적용한다.

서울시는 도로포장에 미세먼지를 줄이는 ‘중온포장’을 도입하는 등 친환경 도로포장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친환경 도로포장은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포장 ▲도로소음 저감 포장 ▲도로 이용환경 개선 포장 ▲자원 신·재생 포장 기술 등을 이용해 도로를 관리하는 서울시 도로포장 유지관리 대책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친환경 도로포장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미세먼지 저감 포장 방식 중 하나인 중

온 포장은 일반 아스팔트보다 약 30도 낮게 시공하는 방식이다. 생산 온도를 낮추면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 발생을 줄일 수 있다. 시는 앞으로 시공되는 도로포장에 중온포장을 확대한다. 2027년까지 모든 노후포장 정비공사에 중온포장을 적용할 방침이다.

소음 저감 도로포장으로는 ‘배수성·저소음 포장’이 있다. 현재 기술이 상용화된 상태다. 배수성·저소음 포장은 빗물을 배수하는 공극 속으로 타이어 마찰을 흡수하는 포장기술이다. 미세공극을 포장 표면에 노출시켜 소음을 흡수한다. 소음이 많은 주택가, 학교, 병원 등에 적용할 계획이다.

도로 이용환경 개선 포장으로는 ‘고내

구성 컬러 포장’을 적용한다. 고내구성 컬러 포장은 버스전용차로의 시인성과 내구성을 위해 필요한 포장 기술로 현재 사용되고 있다.

자원 신·재생 포장은 폐아스콘 등 건설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아스콘 재활용’이 현재 상용화됐다. 태양열을 전기로 전환하는 ‘태양열 패널 포장’도 기술도 있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급변하는 기후·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로포장에 친환경 기술을 도입하겠다”며 “2027년부터는 모든 노후포장 정비공사에 친환경 도로포장을 적용 시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363억 투입 ‘거미줄’ 전선 지하화

서울시가 거미줄 같이 공중에 얹여 있는 전선을 땅 속에 묻는다.

서울시는 전선을 지하에 매설하는 공중선 지중화 작업을 6.21km 구간에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363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보행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전주와 어지럽게 얹힌 공중선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대풍 등으로 전도 위험의 우려가 있어 지중화가 필요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정비구간은 중랑구 중랑교~동일로 지하차도, 관악구 관악로(동측) 등 총 10개 구간이다. 비용은 서울시와 자치구, 한전

이 각각 25, 25, 50 비율로 분담한다.

시는 한전과 협력해 지난 15년간 약 1900억원을 투입, 73km에 달하는 공중선의 지중화사업을 추진해왔다. 서울 25개 자치구의 지중화율은 2005년 48.7%에서 지난해 59.16%로 올랐다.

시는 향후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일관성 있는 지중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수요 조사 결과에 따라 수동적으로 시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도심경관과 보행환경 개선 측면에서 간선 도로별 지중

서울시, 6.21km 구간 지중화 작업 중랑구·관악구 등 10개 구간 실시

화사업 우선 순위를 선정해 체계적으로 시행한다. 특히 역세권·관광특구지역과 같이 유동인구가 많은 곳과 보행공간에 위치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구간 등 주요 간선도로를 우선 정비한다.

고흥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공중선 지중화는 도시 미관 개선효과가 상당 할뿐더러 시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사업”이라며 “꾸준한 사업시행으로 지중화율이 많이 개선됐지만, 앞으로도 런던, 파리, 싱가포르 100%, 도쿄 86% 등 해외 선진 대도시 수준으로 지중화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경기도, 4년내 공무원 30% 늘린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마련

경기도가 올해부터 2023년까지 도 소속 공무원 정원을 30% 확대할 계획이다.

11일 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19~2023년)을 마련, 도의회에 보고한 데 이어 조만간 행정안전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계획을 보면 공무원 총 정원이 현재 1만2892명에서 2023년 1만6천797명으로 30.3%인 3905명 늘어난다.

일반직 공무원 정원이 3951명에서 4535명으로 14.8%(584명), 소방직 공무

원 정원이 8천941명에서 1만226명으로 37.1%(3321명) 증가한다.

연도별 증원 규모는 올해 900명(소방직 743명), 2020년 1040명(소방직 872명), 2021년 968명(소방직 838명), 2022년 828명(749명), 2023년 169명(소방직 119명)이다.

도는 민선 7기 핵심가치인 ‘공정·평화·복지’를 구현하고, 국정 운영 방향과 행정 환경 변화 등 새로운 인력 수요에 대응하며,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무원 인력증원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지난 6일 오후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컨벤션홀에서 열린 부산항 북항 통합개발 추진단 출범식에서 오거돈 부산시장(오른쪽 2번째)이 북항 통합개발 계획을 보고받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시, 해운항만 일자리 5만개 추가 창출

2030년 목표… 16개 핵심과제 선정

부산시가 오는 2030년까지 해운항만부문 일자리 5만 개를 더 만들기 위한 전략사업 시행에 들어간다.

부산시는 11일 “민선 7기 동북아 해양 수도 조성을 위해 지역의 전통 뿐만 아니라 해운·항만물류 기업이 4차 산업혁명 등

시대적 흐름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신기술 개발, 창업 등을 지원하는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시는 해운·항만물류 정책방향을 제시한 ‘해운·항만물류산업 활성화 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현재 13조 원 수준의 매출 규모와 4만 8000 개의 일자리는 2030년까지 각각 27조 원과 10만 개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이를 위해 항만연관사업 인프라 조성, 해운·항만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일자리 및 창업·기술 개발 지원 그리고 해운·항만물류 지원체계 및 제도 마련 등 4

대부분에 16개의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지난해 부산시가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제정한 ‘해운항만산업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조례’의 부산시 고유브랜드인 We-Busan의 확산을 통해 2030년까지 500개 기업을 선정, 집중 육성하여 글로벌 해양비즈니스 시장 진출 확대를 도모한다.

올해 3월부터는 부산항만공사(BPA), 부산테크노파크 등과 함께 ‘해양·항만 창업아이티’를 조성, 신기술 개발과 창업 컨설팅 등을 통해 매년 20여 개 기업을 지원하고, 상반기 중에 해양·항만산업 육성을 전담할 기구설립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이번에 수립한 종합대책이 해운·항만물류산업을 지식서비스산업으로 전환하고, 정부의 지원정책을 이끌어 내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산=최인락 기자 remark@